

#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과 소비자 정책 시사점

## 목 차

1. 서론	/ 02
2.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 FTA	/ 03
3.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 국제기구	/ 14
4. 결론 및 시사점	/ 18

## 1. 서론

-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의 국경간 거래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데이터 이동과 지적재산권을 포함”(이효영·박설미, 2021, pp.4-7)<sup>1)</sup>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최종생산물이나 중간재 형태의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가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거래되는 교역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sup>2)</sup>
-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증가하고 범위가 확장되면서 국경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디지털 무역규범이 중요해짐
- 아직까지 세계 공통의 규범은 마련되지 않았고, 이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따라 국가나 지역 경제공동체가 선호하는 규범의 내용과 방향성이 상이하며, 기술과 이에 기반한 디지털 교역재의 발전 속도가 빨라 새로운 이슈를 규범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다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양자 또는 다자 국가 간 체결되는 자유무역 협정인 FTA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 구속력이 있는 규범의 형태로 반영하고 있음

1) ‘디지털 무역’을 “인터넷 상 소비재의 판매와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의 이동, 스마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여타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USTR, 2017), “디지털로 주문되거나 디지털로 배달되는 모든 무역”(OECD 등, 2020) 등으로 정의하기도 함(이효영·박설미 (2021)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2) 국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규모를 예로 들면, 2016년 약 17백만건, 16억불 수준에서 2020년은 64백만건, 38억불로 각각 265%, 130% 증가했음(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2020.5.25. 최종접속)

- 또한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국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디지털 무역규범의 제정 움직임이 활발함
- 디지털 무역규범은 소비자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등 광범위한 소비생활 관련 사항을 규율함
  - 해외직구의 증가 외에도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디지털 교역의 확대가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본고는 주요 우리나라가 협정을 체결했거나 참여 계획이 있는 FTA, 그리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규범의 제정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 FTA

### 2.1 개요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래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FTA부터 협정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음
  - 한·싱가포르FTA 이후 EU, 미국 및 중국 등 주요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에 전자상거래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챕터로 포함

- 특히, 작년 11월 타결되어 발효를 준비 중인 FTA로 참가국이나 교역 규모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예상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에는 전자상거래가 조항이 기존에 비해 자세하게 반영됨
- FTA 협정문의 구성과 내용은 협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규정, 통관, TBT(무역기술장벽), SPS(위생 및 식품검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
- 상품무역 및 서비스, 위생 및 식품검역, 지적재산권 등은 소비자권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비자정책 분야는 주로 ‘경쟁(competition)’ 장(챕터)과 ‘전자상거래’ 장에 반영됨(이금노, 2015)
- 경쟁 챕터에는 소비자 보호법 집행에 관한 협력 조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때의 ‘소비자 보호법’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주로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심임
- 전자상거래 챕터는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인 유형인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아래에서는 FTA에 디지털 무역규범을 반영하는 세계적인 동향, 우리나라가 협정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 중 교역 규모 등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FTA에 반영된 디지털 무역규범 내용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살펴봄

## 2.2 디지털 무역규범의 FTA 반영 동향<sup>3)</sup>

□ 국경간 무역에서 디지털 교역이 중요해지면서 FTA 협정에서도 디지털 무역규범을 비중 있게 다루는 추세임

○ 북미3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2020년 7월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로 개정하면서 전자상거래 대신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챕터를 도입함

- 미국과 일본은 기존 FTA에서 협정문의 한 챕터 수준으로 반영되었던 전자상거래 등의 디지털 무역규범을 2020년 1월 발효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에서 별도의 FTA 협정으로 체결
-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는 디지털 교역 분야에 대한 FTA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을 체결하였고, 2021년 1월 발효

○ 이는 FTA 협정에 포함되는 디지털 분야 무역규범이 전자상거래 중심의 규율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온라인 소비자보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같은 디지털 비즈니스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임

□ 디지털 경제 선진국이 주도하는 FTA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에 방점을 두고 협정문에 의무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상호 협력 성격의 조항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을 추진함

○ 최근 디지털 무역규범의 핵심 쟁점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서버 현지화<sup>4)</sup>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sup>5)</sup> 등이며 이는 디지털 무

3) 이효영·박설미(2021)의 보고서 pp.11-12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4)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로 불리며 기업이 수집한 자료를 해당 국가 안에서만 저장 및 처리하도록 하여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역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들이 속한 국가들이 주로 주장하는 정책 방향임

- 아시아·태평양 11개국<sup>5</sup>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의 가입이 거론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보장(제14.11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제14.13조),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제14.17조)가 모두 의무사항으로 규정됨
- 나아가 USMCA는 위 CPTPP의 3가지 의무조항에 더하여 인터넷 서비스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sup>6</sup>)를 의무규정으로,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을 권고 규정으로 반영
- 반면, 디지털 경제화에 뒤처졌거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FTA를 통한 디지털 무역규범 확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이슈에 따라 국가별 입장이 나뉨

## 2.3 우리나라 주요 FTA에서의 디지털 무역규범

### 2.3.1. 한·미FTA

- 한·미FTA는 2006년 7월부터 공식 협상이 시작되어 2011년 2월 합의문에 서명되었고 양국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됨
- 미국과의 전체 교역 규모는 2020년 기준 741억불 수출, 575억불 수입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각각 15%, 12% 정도임<sup>7)</sup>

5) 소프트웨어의 수입, 배급, 판매나 이용 등의 조건으로 영업비밀 성격인 소스코드에 대한 이전이나 접근과 같은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

6)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는 “컴퓨터 서버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의한 전자적 접근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USMCA 제19.1조(정의))”로 폐쇄성을 개선한 운영 형식

- 해외 직구 등의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 수입 통관은 2020년 기준 22백만건, 16억불 수준으로 건수는 2위(35%), 금액은 전체 1위(43%)<sup>8)</sup>

○ 최근 우리나라 교역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디지털 경제와 무역규범 형성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FTA 등을 통해 미국과 체결하는 디지털 무역 규범은 상당한 의의를 가짐

□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범 반영을 논의한 최초의 FTA임(협정문 제15조)

○ 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재화 비차별 대우, 전자서명 및 인증,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온라인 소비자보호 조항 등으로 구성됨

- 또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국경간 정보의 원활한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도 협정문에 반영

○ 서비스와 디지털제품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콘텐츠 자체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보편적인 특징임<sup>9)</sup>

-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은 협정문 제11장 내지 제13장인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와 불리한 대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제품과 디지털제품 전달 매개체를 구별하여 정의함(김윤근·박복재, 2017, p.33)

7)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2021.5.25. 최종접속)

8) 2019년까지 수입통관 건수도 미국이 1위였으나 2020년에 건수는 중국이 1위(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2021.5.25. 최종접속)

9) 협정문에서 디지털제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FTA와 같은 양자적 차원의 협정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제품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비해 무역자유화 정도가 높은 ‘상품’으로 규정하는 규범화를 추진해왔고, 이는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자국 산업 여건을 고려한 조치임(권현호, 2018, pp387-391)

### 2.3.2. 한·중FTA

□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3년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6월 1일 FTA 체결 협정에 서명했고, 동년 12월 30일에 발효됨

○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2020년 기준 1,326억불 수출, 1,089억불을 수입했고 이는 전체 교역 중 각각 26%, 23% 수준임<sup>10)</sup>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규모 측면에서는 2020년 기준 27백만건, 7억불 규모로 건수는 세계 1위(43%), 금액은 미국에 이어 2위(19%)<sup>11)</sup>

□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협정문에 반영(협정문 제15조)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가운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미부과, 전자 인증 및 서명 상호 인정 노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정보와 경험의 공유 및 사업교류, 공동사업 장려 등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사기나 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중요성,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의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 필요성 등을 협정문에 반영(제15.5조)

- 또한 ‘국경간 정보 흐름’을 별도로 두고 원활한 무역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를 모두 중요한 의제로 인정(제15.8조)

10)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2021.5.25. 최종접속)

11)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2021.5.25. 최종접속)



- 전반적인 내용은 한·미 FTA와 비교하여 유사하게 반영되었으나,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2.3.3. RCEP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0.11.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 협정에 서명함
- RCEP은 무역규모나 GDP, 인구 측면에서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임
-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가하고 있고 일본도 추가로 참여하면서 RCEP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함
- RCEP의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협력 등 20개의 챕터로 구성됨
-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한·아세안FTA<sup>12)</sup> 협정문이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원산지나 위생, 기술 규정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경쟁 등 9개 조항이 추가됨
- 한·미FTA에 비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노동이나 환경, 투명성 등은 별도 조항으로 구성되지 않음
- 한·중FTA와 비교하면 금융이나 통신 등 개별 서비스 분야는 별도 챕터가 아닌 부속서 수준에서 담았고 환경 등은 별도의 챕터로 반영되어 있

12) 아세안 10개국과 체결된 것으로, 2007.6월 상품무역협정이, 2009.5월 서비스협정, 2009.9월 투자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임

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 분야는 추가되었음

- 한·미FTA나 한·중FTA 등 이전 협정들에 비해 RCEP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아래 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반영되었음

<표> RCEP 협정문 중 전자상거래 챕터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1절 일반규정	제12.1조 정의	제3절 전자상거래에 기여하는 환경 조성	제12.10조 국내 규제의 틀
	제12.2조 원칙 및 목적		제12.11조 관세
	제12.3조 적용범위		제12.12조 투명성
	제12.4조 협력		제12.13조 사이버 보안
제2절 무역원활화	제12.5조 종이 없는 무역	제4절 국경간 전자상거래 증진	제12.1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제12.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2.15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제3절 전자상거래에 기여하는 환경 조성	제12.7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5절 그 밖의 규정	제12.16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화
	제12.8조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제12.17조 분쟁해결
	제12.9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RCEP 협정문 중 제12장 전자상거래(<https://www.fta.go.kr/rcep>) (2021.5.25. 최종접속)

-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가 거래 중 발생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표(제12.7조)<sup>13)</sup>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됨

13) 공표 내용에는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도 동일(제12.7조 및 제12.8조)

- 또한, 한·미FTA나 한·중FTA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부 FTA에 협력조항 수준으로 반영되었던 스팸 메시지(협정국의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대한 적절한 통제 조치 의무 부여(제12.9조))
-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이전은 일부 국가의 유보 및 적용 제한 조항으로 여전히 협력적 성격이 크나,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국제표준이나 국가 기준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설계 및 유지, 개인정보보호 피해구제 방법 공표(제12.8조), 사업 수행 관련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데이터 이동(제12.15조) 등
-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제8장의 서비스 무역, 제10장의 투자 부분이 전자상거래 챕터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는 등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제12.3조)

#### 2.3.4. DEPA<sup>14)</sup>

-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가 체결하여 지난 1월7일 발효된 DEPA 가입을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음<sup>15)</sup>
- DEPA 협정문은 14개 모듈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와 개인 및 공공 데이터의 원활한 국경간 유통, 온라인 소비자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공간의 상호 신뢰 구축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14)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홈페이지([www.mti.gov.sg/Improvin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The-Digital-Economy-Partnership-Agreement](http://www.mti.gov.sg/Improvin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The-Digital-Economy-Partnership-Agreement)) 및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digital-economy-partnership-agreement-depa](http://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digital-economy-partnership-agreement-depa)) 자료 참조(2020.5.11. 최종접속)

15)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11일 DEPA 가입 관련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6734&bbs\\_cd\\_n=6](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6734&bbs_cd_n=6))(2021.5.11. 최종접속)

- 협정문에는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 영역이나 기존 규범을 심화한 내용이 반영됨
- (온라인 소비자보호) 협정국은 디지털 교역에서 상호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등의 법제를 마련하고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노력
  -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구축해 나가며,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도입도 모색
- (데이터정책)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위해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의 중요성을 공유하되 투명성과 데이터의 신뢰 및 책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중요하게 인식 및 반영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가고,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산업 활용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윤리나 책임성 측면의 거버넌스도 함께 마련
- (디지털 정체성) 디지털 기술 및 보안 분야의 산업 표준 정립 등과 같이 국가 상호간에 디지털 정체성(digital identities)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정보 및 전문가 교류 등 추진
- (디지털 포용성) 성별 및 지역, 소득 등에 따른 디지털 교역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단위의 협업을 촉진
- (경쟁정책 등)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이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업을 추진하며, 디지털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의 협업 필요성 등도 반영

-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에서는 전체 교역 중 전자상거래가 갖는 특징을 하나의 챕터 수준에서 정리했다면, DEPA는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관련된 정책 요소들을 별도 FTA로 종합하였음
- 실용적인 온라인 소비자보호, 디지털 포용성과 인공지능 윤리, 경쟁정책 등 협정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직면한 내부 정책과제가 국가간 교역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각국의 디지털 경쟁력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이는 향후 디지털 무역규범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협정에 가입한다면 소비자 정책뿐만 아니라 각 정책 영역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3.5. 소결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다루고 있으며 국경간 원활한 전자상거래의 지원과 온라인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이 중심임
- 의무보다는 협력이나 노력 수준의 규범 반영이 많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이슈로 논의되는 데이터 이동 등의 내용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디지털 무역을 상세하게 반영하거나 무역 자유화 기조로 체결된 DEPA나 CPTPP 가입 논의<sup>16)</sup>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방향성이 경제전반이나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6)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개최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783.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783.html))(2021.5.4. 최종접속)

### 3.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 국제기구

#### 3.1 WTO<sup>17)</sup>

- 1995년 국제무역기구(WTO)가 국가간 경제 분쟁의 판결과 집행, 분쟁조정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 전반에 적용되는 규범은 마련되지 않음
  - WTO는 1998년부터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실을 이루지는 못함
  - 디지털 무역 분야의 공통규범 제정 필요성이 커지자 2018년에 회원국 중 71개국이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을 채택
    - 방법론이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으나,<sup>18)</sup> 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한 추가 작업을 거쳐 협상을 위한 통합문서(consolidated negotiation text)가 지난 2월에 제한적으로 공개됨
- 통합문서는 정제된 문서라기보다는 협상 참여국의 제안을 종합한 수준의 문서로,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및 개방화, 신뢰 확보 등임
  - (원활화)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전자전송의 법적 체계나 인증, 서명, 전자결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

17) 이규엽·강민지(2021)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요약 또는 인용하였음

18) WTO 회원국 일부만이 협상에 참여했고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서 다자 협상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 (개방화) 국경간 정보 이전 보장과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및 이의 금융 분야로의 확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책임 제한 등
  - (신뢰) 온라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범의 마련 및 적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피해구제나 기업의 법적요건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의 공표,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 2021년 11월에 개최될 제12차 WTO 각료회의(MC-21)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나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 글로벌 데이터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국경간 데이터의 이동,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자국이 주도한 FTA에 반영된 디지털 무역규범을 WTO에도 반영하려고 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이 국가간 이해관계가 나뉘는 사항이 많아 단일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WTO 협상참여국 중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 제정이 미흡하고, 규범이 마련된 선진국 중에서도 내용과 수준은 차이
    - 협상의 과정을 통해 WTO 협정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디지털 무역규범의 정의와 범위가 국가간 불일치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규범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가나 그룹별 입장이 상이<sup>19)</sup>

19)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는 유럽연합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 선진국은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주장하나 개도국은 자국 시장 육성을 위해 데이터 지역화 필요성 주장

### 3.2 OECD

-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새로운 무역규범 이슈로 부각되어 OECD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 고정된 사업장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현행 국제조세 기준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과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이에 고정사업장과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 대비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 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OECD에서 별도 프로젝트<sup>20)</sup>를 통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에 다국적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임
  - 유럽 내 몇몇 국가를 시작으로 자체 디지털세 도입이 시행되고 유럽연합에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OECD 차원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여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 중임
  - 과세안은 두 개의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업모델에 적합한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소재지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시장에 기반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기준
    -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으로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여 첫 번째 축을 보완하는 것임

20)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BEPS) ([www.oecd.org/tax/beps/](http://www.oecd.org/tax/beps/), 2021.5.7. 최종접속)



□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입장 변화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입장을 선회함<sup>21)</sup>

○ 일부 국가가 디지털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함<sup>22)</sup>

□ 디지털세의 도입이 소비자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조직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및 대비 하고 있음<sup>23)</sup>

- OECD 논의 과정에서 소비재기업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디지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별도 세제 도입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도 필요함

- 데이터 확보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여 견고한 독과점적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경우 많은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sup>24)</sup>

21) G20 재무장관 회의(2021.2.26.)에서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https://www.yna.co.kr/view/AKR20210227013200071>, 2021.5.18. 최종접속)

22) OECD 사무국은 과세 대상 범위를 디지털 서비스 사업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미국의 거부감을 덜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전은경, 2020, p.5)

23) [www.sedaily.com/NewsView/22HFKOV7S8](http://www.sedaily.com/NewsView/22HFKOV7S8)(2021.5.18. 최종접속)

24) Taj/Deloitte의 추계의 의하면 프랑스에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해당 기업은 부과된 과세의 4%정도를 부담하나 소비자는 57%, 기타 상인 및 광고주 등이 39%를 부담(Taj/Deloitte(2019), p.27)

## 4. 결론 및 시사점

### 4.1 결론

-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규범 필요성이 커짐
  -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소비의 동조화가 심화됨
  - 디지털 교역의 국경이 낮아지면서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매개로 형성되는 국제 시장의 발전이 국가간 규범의 동조화를 견인함
- 글로벌 단일 디지털 무역규범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간 FTA를 통한 규범 마련 확대가 예상됨
  - WTO를 중심으로 글로벌 단위의 다자간 협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시장지배적인 글로벌 디지털 기업 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간 세부적인 내용에 입장차가 상당히 큼
    - 이에 단기간에 글로벌 단위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합의는 쉽지 않고, 협정이 만들어지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큼
  - 양자나 다자간에 기존 FTA의 보완이나 디지털 교역에 특화된 별도 FTA 체결 등으로 국가간 디지털 무역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자상거래 및 관련된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 중심의 FTA 협정에서 디지털 가속화라는 핵심 경제사회 현상을 상수로 다양한 소비생활 분야로 협정의 아젠다가 확장되고 정책이 연결 및 연계 될 것

- 또한 당사국의 협업이나 노력 수준으로 정의되었던 기존 FTA의 소비자권의 관련 조항이 당사국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의무조항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단위나 특정 국가와 체결하는 디지털 무역규범은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관련 규범이 부재할 때도 발생함

- 무역규범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 이용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경간 거래의 피해 발생 예방과 사후적 구제 문제도 규율함
- 디지털 무역규범의 규율 범위가 데이터 이슈와 거래의 공정성, 디지털 포용성, 디지털 윤리 등으로 확장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소비가치 측면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4.2 정책 시사점

□ 기 체결 디지털 무역규범이 소비자나 소비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협정의 제·개정에 활용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중심으로 소비자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그러나 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 내용이 소비자 보호 수준의 개선을 위해 활용된 사례나 그 영향 등에 대한 연구나 조사 분석은 미흡
-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적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추가 활용 방안이나 향후 FTA의 제정이나 개정 시 반영이 필요한 규범안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피해구제 협력 방안 등 체결된 FTA 협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디지털 분야 협력 모델의 개발 및 발전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추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2020년 총 26,954건으로 전년에 비해 11.4% 증가했고, 2016년 대비는 142% 증가<sup>25)</sup>
- 특히,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상담보다는 소비자의 해외 직접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20년 전년대비 35.4% 증가)

○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언어나 시차 등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하는 것이 쉽지 않음

- DEPA에서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으로 소송이 아닌 ‘대체적분쟁해결 제도(ADR)’ 도입 모색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라 정부나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sup>26)</sup>

○ FTA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와의 국경간 디지털 거래 촉진과 소비자 보호 방안의 모색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 당사국의 의무보다는 협력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25) 상담접수 건 중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가 48.8%, 해외 직접거래가 47.8%이고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5&mode=view&no=1000462413>, 2020.5.13. 최종접속)

26)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12개 소비자보호 전문 기관(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영국,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몽골, 대만, 말레이시아)과 MOU를 체결하여 해당 기관이 속한 나라의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한국소비자원이 MOU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일종의 국제거래 대체적분쟁해결(ADR)을 시행하고 있음

## □ 국내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의 심층 분석 필요

- 디지털 무역규범에 소비자권익을 반영하려면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슈부터 디지털 소비의 소외 문제까지 개별 기술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작동 원리 및 구조,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추세적인 경향성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디지털경제 관련 법제의 정비

-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내부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과 전자상거래 규율 등의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바, 국경간 소비자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중요한 의제로 포함하여 논의하고 필요시 이를 국내법에 반영
  - 예를 들면, 소비자분쟁 해결 측면에서 주요 해외 디지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 하여 이들이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sup>27)</sup>

## □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및 개정 논의에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 구축

2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추진(개정안 제19조)([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ype=1](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ype=1), 2021.5.25. 최종접속)

- 디지털 무역 규범에 반영되었거나 추가 논의되는 대부분의 정책 이슈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기에 디지털 규범을 소비자 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주제인 프라이버시, 데이터 주권, 지적재산권, 플랫폼 경쟁 이슈 등을 소비자 및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접근
  - 관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의 도입 시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도 필요
- 통상이나 개별 이슈별 국내의 정책 당국이나 소비자 관련 주요국 정책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디지털 무역규범에 소비자의 권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 [ 참고 문헌 ]

- 권현호(2018),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동아법학 (78), pp.377-404.
- 김윤근·박복재(2017), ‘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 비교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19(2), pp.25-44.
- 이규엽·강민지(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21 No.3.
- 이금노(2015), ‘FTA 협정문에서의 소비자보호 이슈, 주요내용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61)
- 이효영·박설희(2021),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재)여시재 미래 디자인 시리즈
- 전은경(2020),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65호.
- 전은경(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의 의의와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6호.
- Taj/Delloitte(2019), ‘The French Digital Service Tax; An Economic Impact Assessment’.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
- 산업통상자원부 FTA Korea([www.fta.go.kr](http://www.fta.go.kr))
-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main.do](http://www.index.go.kr/main.do))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